

# 바이오헬스 일자리 10만개 만든다

## 노동계는 의료민영화 우려에 반발

일자리위 2022년까지 SW·IP분야 투자  
복지부, '스마트 임상'·로봇의사 등 개발  
IT 결합한 의사과학자 등 1만여명 양성

민노총 "의료민영화 직결" 본회의 불참  
한노총도 "영리화 의도... 규제완화 안돼"

### 분야별 창출 일자리와 투입 예산

※ 제7차 일자리위원회 주요 안건 기준

바이오헬스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 개발 인공지능 활용한 신약 개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4만 2000개 1881억원
소프트웨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인공지능대학원 신설	2만 4000개 2900억원
지식재산	발명고·특성화고 지원 지식재산 담보대출 활성화	3만 5000개 1406억원

〈자료: 일자리위원회〉

최근 고령사회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뜨고 있다. 정부가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 10만여개를 창출하겠다고 나섰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찮다.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SW)·지식재산(IP)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10만여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예산 6187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과 유전정보 등 첨단기술을 통해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4만 2000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약회사와 임상시험 대상자를 빠르게 이어 주는 '스마트 임상시험' 기술을 개발한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결합한 '한국형 윗슨'(로봇의사) 개발에도 나선다. 국가별 화장품 이용 행태와 피부 특성을 연구하는 사업을 지원하면서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기초과학과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의사과학자 등 전문가 1만여명도 함께 양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예산만 1881억원이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바이오헬스 안건은 국민건강권 침해, 국민의료비 상승을 불러올 의료 민영화와 직결돼 있다"면서 "일방적인 안건 상정 중단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노총도 "바이오헬스 분야는 보건의료 분야의 영리화 의도가 일부 있다"면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신중하게 규제해야 함에도 정책 기조가 규제완화 방식으로만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과 제도 개선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지기엔 너무 먼 추론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년고용 효과가 큰 SW 분야에 내년 2900억원을 투입하고 2022년 까지 관련 일자리 2만 4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은 발명고와 특성화고 학생에게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IP 관련 분야에 내년 1406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3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목희(오른쪽 두 번째) 부위원장이 "일자리 창출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정부 “바이오헬스 등서 10만 일자리” 양대 노총은 “의료 민영화 위한 꼼수”

일자리위, 신성장산업 육성 방안  
4차산업혁명위 대책과 겹치기도

정부가 신(新)성장산업인 바이오헬스와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서 2022년까지 10만개가 넘는 민간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축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이음새에서 일자리 창출 동력을 찾겠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법 개정 등이 뒤따라야 하는 것들이 많아 실현 가능성은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기존에 내놓은 대책 등과 겹치는 부분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노동계는 ‘의료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들은 고용지표에서 신규취업자 증가가 부족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며 “앞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는 이날 대책을 포함해 향후 제8·9차 회의를 통해 연내 총 50여만개의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일자리위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 ▲ SW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시대 혁신성장 ▲ 지식재산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 등 세 가지다. 우선 가장 큰 규모의 4만2,0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과 벤처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미래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제약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의료기기

## 제7차 일자리위원회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

바이오헬스 ..... 4만2,000개



-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 벤처창업 전 주기 지원

소프트웨어(SW) ..... 2만4,000개



- 대학 SW 교육 혁신모델 확산
- 공공부문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

지식재산(IP) ..... 4만6,000개



- 취업연계형 IP 인재양성 사업

자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개발 지원도 확대해 마이크로 의료로봇 등 혁신형 의료기기 연구개발(R&D)을 늘리기로 했다.

SW 분야에서는 인재양성과 산업 생태계 혁신, 혁신기업 육성 등에 집중한다. 대학 SW교육의 혁신모델을 늘리고, 전공이나 학력, 국적 제한 없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해 관련 실무인재 4만명을 키워낸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도 대폭 개선해 발주자의 무분별한 과업 변경 등을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학생과 대학, 기업 3자 협약으로 대학이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형 지식재산 인재양성 사업을 벌인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의 발표를 두고 “의료민영화와 직결된 부적절한 안건”이라고 비판했다. 안건 중 바이오헬스 일자리 창출의 골자인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이 의료민영화의 길을 터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바이오헬스 관련 안건 철회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일자리위 본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역시 “바이오헬스 분야는 보건·의료분야의 영리화 의도를 일부 담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훈잎 기자

# “고용 쇼크, 최저임금 탓”

국책 연구기관 KDI, 추락 원인으로 첫 거론

## 인구구조 변화·경기만으로 급격 위축 설명하기 어려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불거진 ‘고용 쇼크’ 원인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고용지표 추락의 원인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KDI는 11일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한국 경제는 투자 부진을 중심으로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고용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7월 취업자 수 증가폭(5000명)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KDI에 따르면 향후 경기를 전망하는 경기선행지수는 23개월 만에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고, 기업 투자 상황도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 7월 주요경제지표 증감률 (단위: %)

전산업생산	1.2
광공업생산	0.9
서비스업생산	2.0
소매판매액(소비)	6.0
설비투자지수	-10.4
건설투자지수(건설 기성액)	-7.0

\* 전년 동월 대비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대비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수출 호황을 맞고 있는 반도체 부문이 23.9% 급성장한 데 따른 것이다. 심각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 부문은 12.0% 감소하면서 업종별 양극화 현상이 이어졌다.

경제주체들의 경기전망은 더 암울하다. 7월 경기선행지수는 99.8로 기준치(100) 아래로 내려앉았다. 2016년 8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선행지수는 100 이상일 경우 ‘경기상승’, 이하면 ‘경기하강’을 의미한다. 얼어붙은 심리는 투자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설비투자는 10.4% 감소해 5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투자(건설 기성액) 부문도 7.0% 줄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 KDI마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고용에 악영향 미쳤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 급격한 위축  
인구구조 변화만으로는 설명 어려워”  
수출 증가세 유지… 경기는 하방 가능성  
소비 다소 회복 불구 내수 개선엔 미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고용 쇼크’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고용 지표 추락의 원인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KDI는 11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내수 경기를 반영해 고용 상황도 악화되는 추세”라면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와대를 비

롯해 정부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률 자체는 개선됐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결이 다른 분석이다. 김 실장은 “우리 사회가 최저임금 논의에 만 매몰돼 단기적 성과를 따지면서 소모적 논쟁으로 가고 있는데 그럴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다양한 취지에 맞는 정책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쯤 어떤 평가를 받겠다는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하락 위험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수출 증가세가 유지돼

급락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지만 이달 들어서는 입장은 바꾼 것이다. 김 실장은 “지난해까지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 올해 들어 그래프가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옆으로 가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가까워진 것 같다”면서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KDI도 지난 5월에 올해 성장률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은 2.9%로 전망했는데 점점 달성이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KDI는 투자 관련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지표가 다소 회복됐지만 내수 개선을 이끌어 내기에는 미약하다고 봤다. 지난 7월 설비투자 지수는 117.5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0.4%나 떨어졌다. 그동안 설비투자를 이끌었던 반도체 산업도 지난달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이 1년 동안 66.1% 급락해 향후 설비투자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정부가 혁신 성장으로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최저임금 반대’ 소상공인 연합회장 수사

검찰 “사업비 4억 횡령 혐의”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檢 송치  
연합회 내부선 “정치 외압”

검찰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운동을 펼쳐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2016년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를 결산서에 수입 금액으로 반영하지 않아 연합회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 4일 연합회에 2016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소상공인 희망센터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올 초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최 회장과 맞섰던 소상공인연합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최 회장 측이 2016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6700만원을 회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최 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최 회장에 대한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지난 7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이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사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온 최 회장과 연합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측에서 최 회장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검찰에 먼저 말했다”며 “그래서 최 회장 측에 이를 반박할 추가 자료가 있는지 내라고 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선 “정치 외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당시 고발한 회원들도 모두 수긍하고 일단락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데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여는 등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왔다. 당시 소상공인 3만 명(연합회 추산)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조재희·박해수 기자

## 한국경제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A13면 경제

# “30년 된 최저임금 결정방식 바꿔야”

## 최저임금 결정 핵심 역할인 공익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중립성·공정성 담보 못해

‘기울어진 결정’이란 논란 속에서도 30년 넘도록 유지돼온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1일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후 공익위원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매년 불공정 논란 속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만 30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며 “2000년대 들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3자가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뿐이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모두 갖춘 공익위원 임명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방식

국회 승인 또는 의결	미국, 브라질 등
노사단체 의견 수렴해 정부가 결정	그리스, 네덜란드 등
별도 위원회 심의 참고해 정부가 결정	스페인, 프랑스, 일본 등
노사단체 등이 참여한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	한국, 독일, 영국 등
노사단체 협약 통해 결정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는 또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지난 30여년간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는 등 최저임금의 권한에 문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무효라면 재심의 요청을 냈으나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방안으로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공익위원을 고용부 장관이 아니라 노사단체나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아예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국회 내에 사회적 대화기구와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통계 지원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 포스코도 눈앞... 노조 설립 바람

포스코 정규직 15일 총회서 논의  
삼성·네이버·넥슨 창립 잇따라

‘워라밸’ 추구, 갑질 반감도 영향  
재계 “정규직 강성 노조화 경계”

# 포스코에선 새 노동조합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포스코는 1990년 조합원 2만 명이 가입한 노조가 있었지만 노조 간부의 비리 사건으로 조합원이 대거 탈퇴해 현재는 97년 설립된 노경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포스코 새 노조 준비 위원회는 오는 15일 가입 의향을 밝힌 조합원을 모아 총회를 연다. 총회에선 다음 달 초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지회 출범에 대한 찬반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판교의 게임업계에선 이달에만 2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에 가입한 넥슨 지회와 스마일게이트 지회다. 이들 노조의 창립 선언문에는 게임업계 특유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다. 또 40대로 접어든 고령 개발자들의 노후 불안도 노조 설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넥슨 노조는 창립 선언문에서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12조원대로 성장했지만 노

## 노조 설립 확산되는 산업계

기업	시기	내용
삼성전자	2월	퇴직 앞둔 영업직 2명 노조 설립 신고서 제출
네이버	4월	첫 사원노조 ‘공동성명’ 출범
SK하이닉스	9월	생산직과 별도 기술사무직 노조 출범
넥슨	9월	민주노총 산하 게임업계 첫 노조 설립
스마일게이트	9월	민주노총 산하 노조 ‘SG 길드’ 설립
포스코	9월	기존 노조·노경협의회 이외 새 노조 설립 추진 중

자료:업계 취합

동자들의 처지는 열악하다”며 “과로가 일상이 된 게임업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에 노조 설립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했던 삼성전자(2월)와 포스코는 물론 노조와 거리가 멀었던 정보기술(IT) 업계에까지 ‘노풍(勞風)’이 불고 있다. 지난 4월 네이버의 사원노조가 출범한 데 이어 이달에는 SK하이닉스의 기술사무직 노조도 문을 열었다.

특히 재계는 국내 철강업계 1위 포스코의 노조 설립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포스코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가 설립돼 1만7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포스코 노조는 금

속노조에서 현대차·기아차 노조에 이어 셋째로 조합원 수가 많은 정규직 노조가 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 불쑥 늘게 되면 노동계와 경영계 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에선 현 정부가 노동친화적인 까닭에 어느 때보다 포스코에 새 노조가 설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최근 선임된 최정우 신임 포스코 회장이 노동자·지역 사회 등 이해당사자와의 상생을 강조한 ‘더불어(With) 포스코’ 비전을 제시한 점도 노조 설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그러나 포스코 내부에선 회의적인 견해도 나온다. 노경협의회가 노조 역할을 맡은 97년 이후에도 포스코 내부에선 새 노조 설립 시도가 있었지만 직원들이 노조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무산됐다는 것이다.

의명을 요구한 한 포스코 직원은 “자체 노조 설립은 몰라도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세우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 직원이 많다”며 “철강업은 파업으로 용광로를 멈추면 노사 모두에 주는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노조 설립 여부를 떠나 노조 설립 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직원들이 불만들이 터져나오다 오프라인 집회나

노동조합 결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임원 갑질에 저항적인 신세대 직원들의 성향도 한몫하고 있다 고 보고 있다.

재계도 노조 설립은 근로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리란 점은 인정한다. 다만 공장 자동화(무인화) 설비 도입과 사업 구조조정, 기업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 노조가 없었을 때는 가능했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노조가 설립되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 판단은 노조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대기업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게 되면 정규직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결권이 보장된 현행법상 노조 설립은 노동자들의 고유 권리이지만 국내 노동계가 정규직을 중심으로 강성 노조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특히 노조의 보호를 받는 저성과자들이 계속 자리를 보전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 4명이나 숨졌는데…‘포스코 특감’ 공개 꺼리는 고용부

1월 유독가스 유출 4명 질식사  
대구지청, 열흘간 특별감독 실시  
318건 규정 위반 적발했지만  
49쪽 보고서 중 4~5쪽만 공개

지청 “재판 영향 줄까봐 비공개”  
금속노조 “공개 당연…포스코만 왜?”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지난 1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해놓고도, 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금속노조와 고용부 등의 말을 들어 보면,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1월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월26일 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포스코 현장을 찾아 회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고에 관한 고용부 대구지청의 특별감독 결과보고서를 최근 받았다. 문제는 49쪽에 이르는 전체 보고서 가운데 공개된 보고서는 4~5쪽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온전한 내용은 특별감독을 시행한 배경과 사업장 현황,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수 정도로, 이미 알

려진 것들이었다.

당시 사고는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 냉각탑의 내장재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4명은 모두 현장에서 질식사했다. 대구지청은 추가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

고 사고 나흘 뒤인 1월29일부터 2월9일까지 열흘 동안 52명에 이르는 감독반을 꾸려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후 대구지청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등에 대해 총 318건의 산업안전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과태료 5억5575만원을 부과하고 415건에 대해 사법조치했지만, 위반이나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노동안전실 관계자는 “이런 대규모 특별감독을 하면 다른 현장에선 당연히 노조와 결과를 공유해왔다. 노조는 사용자, 정부와 함께 재해예방의 핵심 주체인데, 고용부가 유독 포스코에 대해서만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해 운영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하며 낸 보고서에

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적극적 정보 공개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일정 시점에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해 그 결과가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지청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특별감독 결과 비공개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정보공개법을 잘못 해석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안전공학)는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당사자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권리가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들을 말한다”며 “재해조사 결과는 재해 재발을 막는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고용부가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 고용부, 14년만에…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직접교섭’ 첫 중재

교섭대상 배제된 비정규직 노조  
중재 성사 팬 노사교섭 테이블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검토중

고용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회사와 비정규직노조의 교섭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중재 시도는

이 문제가 불거진 뒤 14년 만에 처음이다.

11일 노동계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지난주 현대·기아차와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양쪽에 “현대·기아차 원청과 비정규직지회를 핵심 주체로 하고 금속노조 또는 현대기아차지부(정규직 노조) 등 보조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교섭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회사와의 1

대1 교섭을 요구하는 비정규직지회와 정규직 노조·하청업체 등을 포함한 다자간 협의를 고수하는 현대·기아차 사이에서 정부가 중재안을 낸 것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 7일 비정규직지회의 요청에 따라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동안 현대·기아차는 직접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지회를 직접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뒤 몇 차례 교섭이 열리기는 했으나, 정규직노조와 하청업체를 포함한 다자간 협의에 그쳤다. 이번 중재가 성사되면 비정규직노조는 처음으로 핵심 당사자로서 현대·기아차와 교섭 테이블에 마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010면 사회

주 앞게 된다.

고용부의 중재 시도는 2004년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로 처음이다. 14년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던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문제에 정부가 나서는 것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개혁위는 지난달 1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 고용부와 검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지연시켰다”면서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고 노사 협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013면 공공정책

## 산재보험 직업계고 이어 대학생까지 확대

현장실습 중 발생한 모든 사고·질병 대상  
근로자에 준해 보험 적용... 22만명 혜택

산업현장 실습생의 산재재해 보험 적용 범위  
가 기존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에서 대학생(4년제·전문대학)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현장 실습생에 대  
한 산재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  
을 11일 밝혔다.

현장실습생이 산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123조’는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현

장 실습생으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면 근로자에 준해 산재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1998년에는 현장 실습생의 범위를  
‘직업계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지금껏 직업계  
고 현장 실습생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학제와 취업구조가 변화했  
고 현장 실습이 대학으로 확대 보편화됐기 때  
문에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대학생까지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업계고 실습생만 산재보험을 적용하면 6  
만명 정도가 혜택을 봤다. 앞으로 4년제, 전문

대학 실습생까지 확대했을 땐 16만명이 추가  
돼 총 22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것으  
로 기대된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 보  
상 수준은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받는  
다. 실습생이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으면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에 준해 지급한  
다. 재활·직업훈련 기회도 제공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국장은 “현장  
실습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가 마련된 이  
후 20년 만에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혔다”  
면서 “청년들이 양질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거  
쳐 노동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가이드라인도 안 지키는 ‘文정부 공공부문 정규직화’

## 예탁결제원, 노동자대표 출속 선출 유도·비밀 협상

관리자급 직원 7명에게만 대표를 선출하라고 통보 한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공지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자신을 대표로 정해 주택금융공사도 ‘잡음’

한국예탁결제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관련 협의회를 진행할 노동자대표를 출속 선출도록 유도하고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정부의 정규직화 협상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다른 금융권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돼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가 11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예탁원은 협상 시작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경비,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7개 직종 용역업체 관리자급 직원 7명에게만 이메일을 보내 다음 날인 22일까지 노동자대표를 선출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는 3교대 체제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어 하루 만에 전체 합의로 대표자를 선

출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했다. 메일을 받은 한 관리자급 직원은 이 같은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자신을 노동자대표로 제출했다. 다른 관리자급 직원은 공지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자신을 대표로 정한 뒤 동의서명만 받아 예탁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예탁원이 사실상 지목한 관리자급 직원들로만 노사 협의기구(이해관계자협의회)가 꾸려지게 된 셈이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우 사무실 개시판에 관련 사실을 공지한 뒤 대상자 전원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노동자대표 후보 신청을 2주간 받았고, 대상 직원을 강당에 모아 대표자를 공개 선출도록 했다.

박봉규 노무사는 “정규직화 방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협의체 구성 자체가 가이드라인에 적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사측이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가 알 수 있게 대표자 선출부터 세부 일정을 다양한 식으로 공지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

자는 “일반 근로자의 의사가 대표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예탁원 측은 “파견법상 사측 직원이 용역회사 직원을 직접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예탁원은 비정규직 대표자 선출이 완료된 지 닷새 만에 협상을 시작했다. 여기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채용과 비정규직 노동자 개별 평가 시행 후 정규직 전환 및 틸락 등 사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탁원이 노사 협의기구를 통하지 않고 직종별 노동자대표를 한명씩 불러 개별 면담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별 면담 때 예탁원 측이 노동자대표에게 논의사항을 함구토록 종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1~3차 회의에 참석한 한 노동자대표는 “2차 회의 때는 개별적으로 사측과 면담했다”며 “사측에서 자회사 추진 등 사안은 최종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예탁원이 비정규직 직원 대상 설명회에서 가이드라인에 없는 내용을 거짓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일보가 확보한 녹취록에는 예탁원 측 자회사설립추진단장이 지난 4월 설명회에서 “특수경비 업무는 다른 많은 회사도 문제가 돼서 (정규직) 전환을 안 해도 된다고 정부 가이드라인에 예외사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서울 종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

구 분	전환대상 인원	전환비율(목표)
중앙행정기관	2만1054명	69.7%
지방자치단체	2만5263명	49.3%
공공기관	9만6030명	71.2%
지방공기업	7527명	50.5%
교육기관	2만5061명	29.6%

\* 2017년 10월 발표 (자료: 고용노동부)

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고용부 가이드라인에는 특수경비를 예외사유로 명시하지 않았다. 예탁원은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낸 가이드라인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따

로 작성된 것”이라면서 “타 부처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협상 과정에서 ‘(협상과 관련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일부 노동자들에게서 받아냈다는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주택금융공사도 용역업체인 콜센터 정규직화 협상 과정에서 관

리자급인 센터장과 팀장들에게만 대표자 선출 공지를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센터장들은 동의서를 받아 노동자대표가 됐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투표를 통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우회 채용 대신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지만 정작 노동자대표들은 사측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말단 비정규직이 관리직에 의해 배제되는 건 정부 정책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면서 “비인도적이고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 일자리 정부라면서…정부내 비정규직은 외면

부처 SNS담당자 선발과정서  
기존 비정규직 공무원 배제  
탈락한 직원들 “박탈감 느껴”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며 총리실을 포함한 13개 부처에 3명씩 모두 39명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각 부처에 3명씩 채용하도록 했지만 기존에 전문임기제로 있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선발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 11일 문체부 등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에서 콘텐츠 기획과 메시지 개발을 총괄하고 부처 SNS를 운영할 인력을 뽑고 있는데, 기존 정부 내 비정규직은 예외 없이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 인력을 다시 뽑는 것보다는 참신한 인재를 새롭게 선발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한을 걸어놓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얼마 전 문체부에서 잡음이 있었던 게 원인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문체부 전문경력관에 지원했던 기존 비정규직 공무원이 전형에서 탈락하자 문체부 고위급 인사에게 직접 항의성 문자를 발송했고, 이 사건이 있은 뒤 문체부에서는 각 부처 온라인 담당자들과 회

의를 하면서 “기존 인력은 뽑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각 부처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공무원은 대부분 서류에서 탈락하면서 절망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되는 39명은 각 부처 직제에 반영한 인력으로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선호할 수밖에 없다. 세종시 모 부처에서 근무하는 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기존 정부 내 비정규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은커녕 더 좋은 일자리로 가려는 길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최희석 기자

## 세계일보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Y13면 지방종합

## 포항, 시내버스 파업 ‘초읽기’

임금 주 52시간 이전 수준 요구  
노조, 13~14일 찬반투표 진행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경북 포항지역 시내버스 단일회사인 코리아와이드포항 노사가 주 52시간 제도입에 따른 근무여건 변화와 임금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11일 포항시에 따르면 노선버스의 경우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어서 지금 까지 노사 간 합의만 하면 연장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인 코리아와이드포항은 내년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포항의 109개 노선에 200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이 회사 노사는 이에 따라 1일 2교대제로 바꿔 주당 52시간 근무를 지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임금 유지를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사는 그동안 20여차례 임금교섭을 벌인 끝에 2차 조정안(24일 근무, 294만원)을 갖고 지난 8, 9일 이틀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총 조합원 317명 중 찬성 118표, 반대 173표, 기권 26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조정에서 24일 근무, 295만원으로 다시 조정권고안이 제시됐고, 노조 측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이르면 오는 13~14일 이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이 투표에서도 부결되면 노조는 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는 버스업계 파업이 가시화 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포항시는 노조가 파업하면 66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 교통편 제공을 위한 안내업무를 담당하고 30개 노선에 전세버스 169대를 투입해 비상 수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 대출임금, 고졸 1.5배… 격차 더 커졌다

## OECD 교육지표 분석 결과

학력별 임금 격차 감소 추세에  
한국은 되레 늘어 불평등 심화  
학벌 따지는 고용문화 여전해  
고학력 실업자 양산 구조 고착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우리나라의 학력수준 간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일과 능력보다 학력을 따지는 고용문화가 바뀌지 않은 탓이 크다. 치열한 대학 진학 경쟁과 학력 과잉, 고학력자 취업난 심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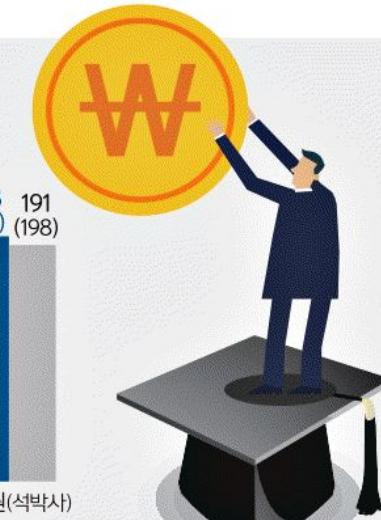
1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한 한국 성인(25~64세)의 학력별 임금은 고교 졸업자 임금을 100%로 봤을 때 대학원 졸업자(석박사)가 198%였다. 이어 4년제 대학 졸업자 149%, 전문대 졸업자 116%, 중학교 졸업자 이



자료: OECD, 통계청

하 72% 순이었다. 고졸자에 비해 대학원 졸업자가 2배, 대졸자가 1.5배의 임금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 격차는 OECD 평균(대학 졸업자 144%, 대학원 졸업자 191%)보다 각각 5%포인트, 7%포인트 큰 것이다.

특히 고졸자 대비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수준을 전년도(2015년)와 비교했을 때 OECD 평균은 각각 2%포인트, 7%포인트 떨어진 반면에 우리나라를 오히려 4%포인트, 8%포인트 올랐다. 학력 간 임금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학력별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흐름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서도 확인됐다. 1995~2016년 4년제 대학 이상을 나온 근로자 임금은 186.3%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에 고졸 근로자와 중졸 이하 임금은 각각 168.8%, 144.0% 증가하는데 그쳤다. 여기에 월평균 임금 자체도 대졸 이상, 전문대졸, 고졸, 중졸 이하 순으로 많이 받는 것을 감안하면 학력차에 따른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 국가진

로교육연구본부장은 "지표만 보면 OECD 국가들도 학력차에 따른 상대적 임금격차가 크지만 상당수 나라에서 학교와 일터를 오가는 진로 경로가 다양하고 매우 유연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진로 경로가 경직돼 어려서부터 너도나도 대학 진학에 목을 맨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처럼 대학 공부는 취업한 뒤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학위 취득을 하면 기업에서도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무작정 대학 진학에 올인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청년층(25~34세)의 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OECD(평균 44%) 최고수준이었다. 요컨대 최초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 격차가 엄청난 환경이 과도한 대학 진학률로 이어지고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교사 1인당(기간제교사 포함, 2016년 기준)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초 16.8명, 중 15.7명, 고 14.1명)보다 모두 줄었다. 다만 OECD 평균(초 15.0명, 중 12.7명, 고 13.0명)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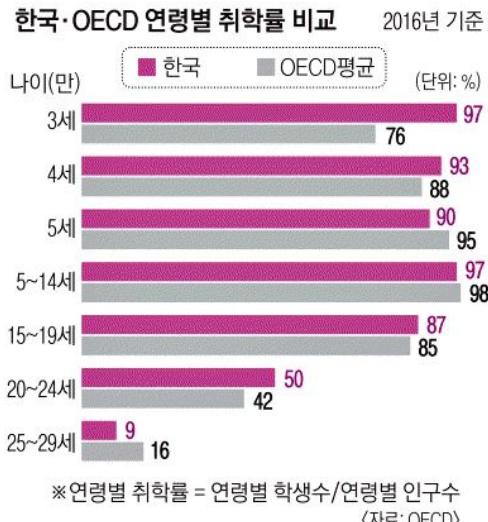
# 어린이집 맡겨야 사는 한국

## 만3세 취학률 97%의 그늘

OECD 평균보다 20%P 높아 최고 수준  
국·공립 시설 수용률은 3분의1에 그쳐  
맞벌이 위해 환경 열악해도 보낼 수밖에  
“보육의 양적 성장보다 양질 대책 마련을”

한국의 만 3~4세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취학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열악한 보육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1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8’를 분석한 결과 2016년 한국의 3세 취학률(해당 연령 인구 대비 어린이집·유치원 재학생 수)은 97%로 OECD 국가 평균인 76%보다 20%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이 만 3세부터인 영국(취학률 100%) 등을 제외하면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97%는 전년 대비 4%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전년(78%) 대비 2% 포인트 떨어진 OECD 평균과도 대비된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 보육환경



경이 열악해 차선책이 없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대부분의 한국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의 수용률(2014년 기준)은 22%로 OECD 국가 평균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68.6%·2012년 기준)의 3분의 1 수준이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국공립 어린이

집·유치원과 달리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송인한 연세대 교수는 “3~4세 취학률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보육의 양적 성장을 보여 주지만, 보육의 질적 수준도 그 만큼 높아졌는지는 다른 문제”라면서 “단순히 보육의 대상을 높이는 정책보다는 수용자인 학부모와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보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보육 목적이 강한 3~4세 영유아 취학률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교육 목적이 강한 5세 이상의 취학률은 전년 대비 떨어져거나 그대로였다.

한편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 간 임금격차는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성인(25~64세) 학력별 임금(2016년 기준)은 고졸자의 임금이 100이라 고 봤을 때 전문대졸자 116, 대졸자 149, 대학원 졸업자 198이었다. OECD 평균은 전문대졸자 123, 대졸자 144, 대학원 졸업자 191이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012면 사회

## “비정규직 연구원 이유없는 재임용 거부는 부당”

### 법원, 해고무효·갱신기대권 인정

재임용 기준을 까다롭게 정한 비정규직 대학 연구원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재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우라옥)는 연세대 선임연구원(박사)으로 일하다 재임용이 거부된 그씨가 학교를 상대로 “해고는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그씨는 2011년 3월 1일 임용돼 6년 만에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그씨가 소속된 연구원의 임용 규정은 “박사 학위 소지자는 6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적이 매우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년

을 초과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대학)가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인사평가) 80점을 초과한 연구원과 재임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에게는 재임용 기준인 80점이 넘으면 근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갈등이 있던 센터장이 제출한 인사자료를 판단할 때 자의적 평가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가 제출한 인사자료만으로는 재임용 거부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을 대리한 류하경 변호사는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갱신기대권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 서울신문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013면 공공정책

〈서스틴베스트 대표〉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류영재 유력

### “사회적책임투자 강화에 부합 인물”

#### 최종 후보 5명 인사 검증 절차 진행



화투자증권 사장 등 5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공단 심사 과정에 류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대표는 의결권 자문기관이자 사회책임투자 리서치기관인 서스틴베스트 설립자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사회책임투자 ‘전도사’로 시장에 이름을 알렸다.

류 대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과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한 금융권 인사는 “사회적책임투자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알맞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류 대표와 함께 유력 후보인 안 사장은 운용 전문가이면서 해외투자 베테랑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실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 사정에 밝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정동칼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연금개혁에 대한 두 시각

연금개혁에 두 시각이 존재한다. 진보와 보수, 공보험과 사보험 쪽 이야기가 아니다. 친복지 진영에서 상충하는 두 시각이다.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에서 시작된 둘의 차이는 깊어져왔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복수의 개편안 역시 두 시각을 반영한다.

한쪽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행동과 여기와 교류하는 사회복지학자들이 핵심 주체이다. 우리 사회 친복지세력의 전통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쪽은 현행 40%를 유지하자고 말한다.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주로 내놓는 비판적 시각이다.

사실 대체율 5%가 연금액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노후보장, 노후빈곤을 가르는 선도 아니다. 그럼에도 연금개혁 노선이 갈리는 분기점이다. 국민연금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다. 진단이 엇갈리니 개혁 방향도 상이하다.

전통적 시각은 국민연금의 재분배 성격을 강조한다. 국민연금 급여산식은 자신의 소득과 연동된 비례급여가 절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된 균등급여가 절반씩 구성된다. 보통 국민연금 대체율이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40%라고 소개되지만, 이 균등급여 덕택에 실제는 계층별로 누진구조를 지닌다.

비판적 시각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역진성을 주목한다. 급여산식의 누진구조는 받는 연금만 살펴본 특성이고,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와 함께 보면, 낸 것과 받는 것의 차이인 순이전액이 상위계층일수록 많다. 과거에 대체율

이 높았을 때에는 더욱 그러했고, 현행 40% 체제에서도 순이전액이 대략 가입기간에 따라 증가하므로 노동시장 중심권일수록 혜택이 크다. 급여구조가 누진적이라도 현재 보험료가 낮아 발생하는 역설이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다. 전통적 시각은 평균치로 접근한다. 작년 국민연금 수령자의 평균 연금액이 37만원, 미래에 가입기간이 늘어도 55만원 정도로 최저 생계비 균방에 머문다.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선 대체율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의 근거이다. 비판적 시각은 평균액이 주는 착시를 경계한다. 국민연금액은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다. 미래 평균액이 55만원이라도 소득이 낮고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20만~30만원에 불과하고 상위소득자는 100만원도 넘는다. 한국의 노동시장 격차 구조에서 대체율 인상이 하위계층에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노후소득에서 기초연금 비중을 높이자고 제안하는 이유이다.

세대 간 형평성에선 더욱 엇갈린다. 전통적 시각은 현세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노후까지 준비하는 이중부담 처지에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족분을 후세대에 의지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고 오히려 세대 간 연대라고 말한다. 또한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지급될 수 있고 후세대의 보험료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국고도 투입할 수 있다. 너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는 충고이다.

비판적 시각에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걱정한다. 공적연금 논의에서 개별적인 사적

부양을 끌어들이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고, 설령 이중부담을 이야기하더라도 어느새 국민연금 역사가 30년이고 노인 10명 중 4명이 국민연금을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수령할 연금에 필요한 보험료의 절반만 내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굳이 중복부담을 따지면 후세대는 점점 늘어날 기초연금과 노인 의료비, 앞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족분과 자신을 위한 연금보험료 등 짐이 훨씬 무겁다고 항변할 수 있다. 앞으로 노후부양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서는 가능한 책임을 다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미래 국고지원도 계층별 연금액 격차를 지난 국민연금이 아니라 노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금 대안에서도 강조점이 다르다. 전통적 시각은 장수시대에 사연금의 공세에 맞서려면 국민연금이 튼튼해야 하고, 중간계층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설계할 때 복지국가를 향한 정치동맹도 가능하다고 본다. 비판적 시각은 공적연금의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으로 넓힌다.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고,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관리 주체를 공단으로 바꾸면 공적연금으로 재편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물론 다층 연금체계에서도 복지국가를 위한 정치동맹은 열려 있다고 기대한다. 서구식 전통경로와 다른 ‘한국형 연금모델’이다.

다음주부터 정부가 지역별 연금토론회를 시작한다. 결국 시민들이 결정할 뜻이다. 연금 개혁의 두 시각, 당신은 어느 쪽인가?

## 신문로

## 전략적 봉쇄소송 남용 막아야



서보학

경희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경찰이 세월호 추모집회를 연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소송이 지난주 법원의 조정으로 금전 배상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미 지난 5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시민·노동자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진압장비의 손상 등 국가 측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제기는 엄격한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들도 합의나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건은 경찰이 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한 첫번째 사례라 할 수 있다.

지난 이명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및 노동3권을 행사한 많은 시민(단체) 및 노동자(노조)들이 국가의 탄압

을 받았다. 집회·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만 들어진 집시법이 형사처벌의 도구로 남용되었고,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업무방해죄 등이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노동자들에게 마구 적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법적 탄압 외에도 국가가 원고가 된 손해배상소송이 의도적으로 남발되었다. 소위 전략적 봉쇄소송의 등장이었다.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집회·시위나 노동3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나 기업이 시민(단체)·노동자(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경제적 부담을 지울으로써 시민·노동자의 기본권 행사와 연대행동을 방해하려는 소송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초부터 기업이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남발해 노동자들 삶을 벼랑끝으로 내몬 사례가 늘기 시작했고, 지난 보수정권에서는 이윽고 정부가 직접 나서 형사처벌을 넘어 집회·시위에 참여한 시민·노동자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남발하기 시작하였다.

## 국가가 원고돼 손해배상소송 남발

국가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단체행동에 나서는 개인 및 단체는 국가 소송으로 경제적 삶까지 파탄낼 수 있다는 공포를 심

어주어 자유의사를 억압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려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실제 월급과 재산을 압류당한 일부 시민·노동자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하였다. 이런 고약한 소송사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던 것이었다. 시대의 발전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소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약자들의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전략적 봉쇄소송을 소송권의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는 대규모 단체행동권 행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일방만의 책임이 아닌 현장에서 공권력과 시위대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선진외국에서는 피해를 국가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가 집회·시위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민사적 부담을 지우는 소송을 제기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국가 횡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최근 경찰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해

폭력진압의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에 있어서도 경찰은 자기책임은 외면한 채 시민들과 노조를 상대로 총 16억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아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 경제적 강자의 부당한 침해 없어야

이 외에도 경찰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등에서도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손해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의 해결을 계기로 다른 소송 건들 역시 원만하게 종결되기를 기대한다. 국민통합을 위해 경찰 및 관계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합의와 조정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국가뿐 아니라 경제적 강자인 대기업이 집회·시위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하는 시민·노동자들을 상대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는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평화적 집회·시위와 노동3권이 공권력과 경제적 강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는 ‘사람이 먼저’임을 내세우는 현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다.

# 현대重 임단협 2달째 ‘공회전’

해양공장 유휴인력 놓고 대립  
노조, 月 261만원 휴업수당 거부  
파업·상경집회 강경대응 일관  
노사정 대화 개최 여부도 불투명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 문제를 놓고 대화조차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협상 과정에서 감정싸움 까지 겹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도 여름휴가 전인 지난 7월24일을 마지막으로 50일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다.

현대중공업은 11일 회사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지난 7일 공문으로 10일 인력운영 실무협의를 갖자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며 “사면초가에 빠진 회사를 상대로 무조건적인 반대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전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양공장 유휴인력 1220명에 대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40%를 지급하겠다”며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을 수정 신청했다. 생산기술직 평균으로 휴업수당 201만원과 기타임금 60만원 등 한달에 261만원, 연간 3133만원을 받게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울산본사에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3일 해양공장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100% 무급으로 휴업승인을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할 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이 수정안을 신청하면서 휴업수당 지급 시기 도 11월로 한 달 늦췄다. 18일로 예정된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여부를 연기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신청도 받고 있다. 현재까지 80명가량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반발해 12일 오후 4시간

파업에 나선다. 울산시내 시가행진과 함께 일부 간부와 조합원들은 서울 중구 계동 현대빌딩 앞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무급휴직과 전환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말 노조가 울산시에 제안해 노사정이 만나는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사용자 측의 참여를 제안했지만 개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회사 측은 “울타리 안 문제를 정치권과 언론 등 외부에 기댄다고 풀릴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자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거짓 언론 플레이만 일삼는 태도는 경영자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회사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용안정 보장하라”

**하이투자증권 노조**

**고용안정협약 놓고**

**DGB금융지주와 갈등**

DGB금융지주의 하이투자증권 인수 절차가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하이투자증권과 DGB금융지주의 고용안정협약이 갈등의 요소로 떠올랐다.

1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하이투자증권 지부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GB금융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협상을 계속 주장할 경우 총파업을 불시한 총력투쟁에 돌입, ‘매각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형래 하이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DGB금융지주 측이 협상을 늦추면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노조는 인수자인 DGB금융지주에 5년 동안의 고용보장과 단체협약 승계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DGB금융은 협약 내용에 임금피크제 포함을 요구하고 실적이 미진한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 및 구조조정을 연계하자고 주장해 왔다. 또 협약체결 시점을 임시주주총회가

끌나고 인수절차가 다 마무리된 이후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하이투자증권 노조 측은 DGB금융 측에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하며 임금피크제를 계속 고집하고,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총파업을 불시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DGB금융측은 10일 저녁 노조측에 재협상을 요구해 와 밤늦게까지 논의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이 자리에서 DGB금융은 “고용안정협약은 체결하는데 임금피크제는 이번에 논의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협약과 별개로 미진한 사업부 즉 리테일 등의 부서에 대한 인사 및 성과보상 체계 등은 단체협약에 반영시키자”고 노조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우리는 조건없는 고용보장과 단체협상 승계를 요구했는데 지주 측은 리테일 부서 조합원의 임금이나 복지 수준을 떨어뜨리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3번의 사명변경과 매각 과정을 거치며 대량 구조조정 등 고통만 강요받아온 직원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매각 반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 서울시 산하기관 고용 성차별 ‘여전’

## 관리직 여성비율 9% 불과 비정규직, 여성이 더 많아

서울시 산하기관의 관리직급이나 기관장 중 여성 비율은 여전히 미미했다. 고용상태 역시 불안정해 비정규직의 경우 여성이 더 많았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시 산하기관 31곳의 성평등 현황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5개로 16.1%를 차지했다. 20개 이사회 임원 208명 중 여성은 59명으로 28.4%였다. 자문기구

위원 여성 비율은 25.7%로 조사됐다. 32개 자문기구 위원 517명 중 여성은 133명이었다. 산하기관 관리직급 2810명 중 여성은 254명(9.0%)이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16년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여성 관리자 비율 37.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여성 비율은 19.4%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여성 비율(2016년) 37.9%에 크게 못 미쳤다. 비정규직 직원 중에는 여성이 49.7%로, 남성보다 여성은 더 많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여성 비율도 조사됐다. 광주와 인천 모두 관리직급 중 여성 비율은 서울보다 높았으나 기관장, 이사회 임원, 자문기구 위원 여성 비율은 서울보다 낮았다.

고용에서도 여성 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각 영역의 여성 비율 40%를 준수하는 등 여성의 정책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고 고용 전반의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 민노총의 판사 집단 협박, 대법원장은 같은 편이라 침묵하나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시·군법원 판사로 재임용된 박보영 전 대법관의 출근길이 민노총의 시위로 영망이 됐다. 민노총 조합원을 비롯한 30여명이 여수시법원 정문에 진을 치면서 박 판사는 경찰이 통로를 확보한 뒤에야 출근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 판사가 경호 인력 등에 엉켜 비틀거리고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도 벌어졌다. 박 판사는 취임식을 취소했다.

박 판사는 올 1월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전관예우를 마다하고 서민을 상대로 하는 소액 재판을 맡겠다며 시골 판사를 지원했다. 많은 국민이 신선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민노총은 박 판사가 대법관 시절 재판한 쌍용차 정리해고 판결이 청와대와 ‘거래’ 의혹이 있다며 “이명박·박근혜의 부역자”라고 비난했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해당 판결을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꼽은 법원행정처 문건은 판결이 있은지 1년 뒤 작성됐다. 이미 끝난 판결로 어떻게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나. 사법부 권력을 잡은 진보 판사들도 과거든 지금이든 누군가 대법관에게 판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박 판사가 당하는 장면을 본 판사들은 누구든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근래에 판사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유례없이 빈발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재판장 신상털이, 욕설과 비난은 일상적이다. 대기업 총수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여당 의원은 “침을 뱉고 싶었다”고 했고, 전직 여당 의원은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고 했다. 법원 게시판에 ‘석궁으로’ 진심 쏘고 싶다’고 쓴 법원 직원도 있었다. 청와대는 해당 재판장을 파면하라는 국민 청원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그러더니 이제 말로 하는 협박이 아니라 물리적 위협까지 가해지고 있다. 판사들이 소신껏 재판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 때도, 이번 박 판사 사건에도 아무 말이 없다. 민노총이 같은 편이라고 침묵하는 건가. 얼마 전 구속 만기로 일시 석방된 김기준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집단 린치가 가해지는데 경찰이 수수방관했다. 법치를 유린하는 현장을 사법부 수장과 공권력이 모른 척한다면 법치 국가, 민주 국가가 아니라 주먹 국가, 폭력 국가다.

## 매일경제

2018년 09월 12일 수요일 A31면 사회

## ‘노조 와해’의혹 삼성 이상훈 의장 영장 기각

### 법원 “혐의 소명 부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이 ‘삼성노조 와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 16건 중 12건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

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을 거친 핵심 인사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으로 근무하며 노사 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성승훈 기자

# 평창올림픽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 속탄다

**노조 “공사대금 100억 미지급”  
근로자 차량 압수 등 생활고 시름  
발주처 규탄 무기한 농성 예고  
조직위와 체불액 편차 갈등 불씨**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폐막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일부 경기장의 시설 공사 대금이 땀 흘린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강원건설노조는 11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릉역 차고지 환승주차장 조성 공사(2억 9,900여만원)를

비롯해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과 용평·보광경기장 그랜드 스탠드(80억원), 텐트 및 컨테이너 판매·설치대금((12억원) 등 모두 100여억원이 체불됐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평창올림픽이 성공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공무원들과 평창올림픽 조직위는 건설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조직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최준영 위원장은 “화려한 잔치가 끝나자 건설 근로자들의 절규만 허공에 메아리치고 있다”며 “이는 발주처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법에 명시된 발주처의 의무를 제대로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건설현장 임금체불로 인해 차량이 압수되는 등 근로자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자화자찬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또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평창조직위 사무실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평창조직위는 이날 강원도청을 직접 찾아 공사대금 체불이 발생한 사안 별 입장을 밝혔다. 평창조직위 관계자는 “강릉 환승주차장 조성 공사 대금 문제는 이번 주에 꼭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공사비가 추

가로 들어간 현장의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횡령사건이 일어난 셔틀버스 대금은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창조직위는 특히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과 하도급 업체 임금 직접 지불 등 체불을 막기 위한 조치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 일부 인정했다. 평창조직위는 “공사 계약을 대회 일정에 맞춰 준비하다 보니 일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평창조직위가 해결하겠다고 한 체불액은 25억원 가량으로 건설노조가 주장한 액수의 4분 1에 불과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박은성 기자

# 한전공대, 2022년 학생 1000명으로 개교

## 10일 설립용역 중간보고 부지·재원마련 논란 예상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며, 광주·전남 최대 현안사업인 한전공대가 오는 2022년 3월 학생 1000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부지면적 120만㎡로 설립되는 한전공대는 등록금과 입학금을 모두 면제하며, 생활지원금도 지급한다.

한국전력이 10일 전남 나주에 있는 본사 한빛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전공대 설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설립용역을 맡은 AT커니(Kearney)사는 이날 “한전공대는 연구, 교육, 산학연을 아우르는 ‘에너지 특화 클러스터 선도 대학’으로

2030년까지 세계 200위, 2040년까지 국내 최고 및 세계 20위, 2050년까지 세계 최고 에너지공대 10위를 달성하는 계획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학생 정원은 대학원 600명과 학부 400명 등 모두 1000명이며, 외국인 학생을 추가 모집한다. 이는 국내외 교육기관 사례와 학령인구 감소, 연구수행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한 수치다.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은 ‘10대 1’을 기본으로 하며, 전체 교수는 ‘100명+ $\alpha$ ’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전공대는 국내외 최우수 연구 및 창업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아파트형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부지는 ‘대학과 산업단지, 대형연구시설이 공존하는’ 120만㎡ 규모이며, 캠

퍼스 40만㎡, 산학연 단지 40만㎡, 연구시설 40만㎡ 등이다.

이처럼 한전공대 밀그림이 제시됐지만 개교까지는 ‘입지와 재원’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 입지는 개교 일정을 고려해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한 국·공유지’를 1순위로 꼽았다. 특히 ‘산학연 일괄체계 구축과 확장’이 쉽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여건과 접근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정 방안은 광주시와 전남도 합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어려우면 용역 내 전문가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남도는 한전이 있는 나주를, 광주시는 나주와 인접한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병주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논란 때문에 입지를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고, 이상배 광주시 전략산업본부장은 “광주·전남 상생원칙에 따라 결정 한다”는 입장 차이를 내보였다.

설립 재원도 문제다. 중간보고서는 70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한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빈 한전공대설립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전이 흑자와 적자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학교 설립에 따른 재원은 이와 상관없이 마련한다”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남은 과제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나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